

수 신 청와대 NSC 사무처장, 시민사회수석실
참 조 청와대 안보실 담당 비서관, 시민사회수석실 담당 비서관
발 신 사드철회 평화회의 (담당 : 사드저지전국행동 / 평통사 오혜란
소성리 종합상황실 강현욱 교무 windrest4438@gmail.com)
제 목 소성리 주한미군 사드 성능개량 관련 질의서
날 짜 2020. 12. 4. (총 22쪽)

[소성리 주한미군 사드 성능개량 관련 질의서]

소성리 주한미군 사드는 미 본토 방어를 주 임무로 하고 있다.

- 주한미군 사드 레이더가 전진배치모드로 사용되지 않도록 감시장치 마련해야 -

1. 평화·번영·통일을 위해 애쓰시는 귀하께 경의를 표합니다.
2. 국방부 주장과 달리 주한미군 사드는 배치가 완료된 직후 인 2017년 12월부터 성능개량을 해왔으며, 그 목적은 미 본토 방어를 위해 주한미군 사드 레이더를 전진배치모드로 운영하며, 이를 위한 탐지, 추적, 식별 능력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있습니다.
3. 소성리 주한미군 사드 레이더의 전진배치모드로의 운용과 탐지, 추적, 식별능력 향상은 미중 간 전략 안정을 크게 훼손하고 미국 절대 우위의 전략 지형이 들어서는데 기여합니다. 또 한미일 삼각MD와 이를 매개로 한 한미일 군사동맹, 나아가 콰드 플러스의 구축으로 동아시아판 신냉전체제의 도래를 앞당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4. 주한미군 사드를 계속 성능개량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드가 남한 방어에는 여전히 군사적 효용성이 없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한반도에서 미사일방어가 근본적으로 갖는 지형적, 시간적, 물리적 한계를 극복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5. 소성리 사드 배치는 불법 도입에 이어 불법 부지 공여, 불법 환경영향평가, 불법 방위비분담금 전용 등 불법으로 점철된 사업입니다. 이에 사드는 미 본토 방어를 위해 평시에는 우리나라의 토지, 세금, 환경과 주민의 삶을, 유사시에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자산 등을 희생시킬 것을 전제로 해 배치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6. 주한미군 사드는 안보와 국민 생명을 지키기 보다는 오히려 더 위태롭게 합니다. 또 주한미군 사드는 도입과정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또 앞으로도 모든 과정이 불법으로 점철될 무기체계입니다. 이에 주한미군 사드를 즉각 철수시켜 안보와 국민생명을 지키고 불법성을 제거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입니다.
7. 문재인 정부는 안보와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주한미군 사드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는 존재인 주한미군 사드의 철거에 나서야 하며 그 이전까지는 주한미군 사드 레이더가 전진배치모드로 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루마니아나 폴란드가 자국 내 미국의 MD체계에 대해 확보하고 있는 수준의 군사주권적, 사법주권적 감시 통제장치라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8. 이에 불임과 같은 우리의 질의에 대한 국가안보실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사드철회 평화회의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소성리 주한미군 사드는 미 본토 방어를 주 임무로 하고 있다.

-주한미군 사드 레이더가 전진배치모드로 사용되지 않도록 감시장치를 마련해야-

1. 소성리 주한미군 사드는 배치 직후부터 성능개량을 해왔으며, 그 목적은 미 본토 방어를 위해 주한미군 사드 레이더를 전진배치모드로 운영하며, 이를 위한 탐지, 추적, 식별 능력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있다.

- 소성리 주한미군 사드는 배치를 완료한 직후인 2017년 12월부터 C2BMC를 비롯한 성능개량을 계속해왔다(미 GAO 보고서, 2019. 6.).
- C2BMC는 “미국의 BMDS(Ballistic Missile Defence System)의 모든 MD 요소를 통합시키는 하드웨어(워크스테이션, 서버, 통신 장비)와 소프트웨어”(미 GAO 보고서, 2020. 7.)로 미 전략사령부의 전략지휘통제를 보장하는 통신체계다.
- C2BMC에 통합되어 미 전략사령부의 지휘통제를 받는 미 MD 체계는 AN/TPY-2 사드 레이더를 비롯한 모든 지상, 해상, 항공, 우주 배치 센서와 함께 GBI, Aegis, Aegis Ashore, THAAD 등 패트리엇을 제외한 모든 요격체계를 아우른다. THAAD 요격체계는 미국 방어에 직접 기여할 수 없으나 THAAD 레이더가 미국 방어에 직접 기여하기 때문에 C2BMC에 통합되어 미 전략사령부의 지휘·통제를 받는다.
- 소성리 주한미군 사드도 C2BMC에 통합되어 미 전략사령부의 지휘·통제를 받는다.
- 소성리 주한미군 사드는 배치를 마치자마자 C2BMC의 소프트웨어를 Spiral 6.4에서 Spiral 8.2-1/BOA 5.1로 성능을 개량하였다. 이 성능개량으로 주한미군 사드 레이더는 BOA 5.1를 이용해 위성 탐지정보를 받아 미국을 겨냥하는 북중 ICBM을 조기에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개선하였고, 일본 배치 사드 레이더(AN/TPY-2)나 태평양 미 이지스 레이더(AN/SPY-1)와의 정보 통합으로 ICBM에 대한 추적 능력을 개선했으며, 해상도 높은 사드 레이더의 탐지, 추적정보를 태평양 미 이지스함과 미 본토 배치 GBI 체계에 전송함으로써 미국을 겨냥한 ICBM에 대한 요격 횟수를 늘리고 정확성을 높이는 등 요격 확률을 증대시킬 수 있게 되었다.
- 2019년 6월에는 소성리 주한미군 사드의 C2BMC가 Spiral 8.2-3/BOA 6.1로 성능개량되었는데, 이 성능개량으로 태평양 배치 이지스함은 사드 레이더의 추적정보를 이용해 이지스 BMD의 원거리 교전(EoR)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지스 체계의 방어범위를 5~7배나 확대시킬 수 있게 되었다.
- 한편 주한미군은 소성리 사드의 기존 GPS 안테나를 신형 PNT 안테나로 교체했을 것으로

로 보이며, 이 또한 소성리 사드의 전진배치모드로의 운용을 전제로 한 교체로 여겨진다. PNT는 위치, 항법, 시각을 가리키는 영어 약어로 미 국방부 모시계(master clock)와 사드가 배치되어 있는 지역의 시각(regional clock)과의 오차를 보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미 본토를 겨냥한 ICBM을 요격하는 데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지역 시각과 미 본토 시각과의 오차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 남한을 겨냥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탐지, 추적, 식별, 요격하기 위해 주한미군 사드 레이더를 종말모드로 운용한다면 굳이 미 국방부의 모시계와의 시각차를 보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 또한 2020년 5월 29일, 소성리 주한미군 사드 부지에 반입되어 기존 EEU와 교체된 신형 EEU와 발전기도 사드 레이더의 전진배치모드로의 운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교체로 보인다. EEU는 C2BMC와 사드 안테나를 연결해 주는 통신센터로서 역할을 한다. 미 국방부는 주한미군 사드 레이더를 포함해 전 세계에 배치된 12기의 사드 레이더의 EEU를 모두 신형 EEU로 교체 중에 있으며, 신형 EEU로의 교체는 바로 성능 개량된 C2BMC와 안테나의 성능 구현을 뒷받침해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 종말모드로 운용해야 할 주한미군 사드까지 전진배치모드로 사용할 수 있는 EEU를 배치하는 점으로 미뤄볼 때 소성리 사드 레이더의 EEU를 신형 EEU로 교체한 것은 주한미군 사드 레이더의 전진배치모드로의 운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 미 레이시온사는 EEU의 신형 x86 마이크로프로세서가 구형보다 5배의 처리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성능 개량된 안테나의 탐지, 추적정보를 신속히 분석 처리해 이를 C2BMC로 전송하기 위한 것이다.
- 발전기 교체는 안테나와 EEU의 성능이 개량된 레이더를 전진배치모드로 운용하는데 따라 보다 증대하게 될 전력소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소성리 주한미군 사드 레이더의 성능개량은 미 본토 방어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 레이더의 전진배치모드 운용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한편 주한미군이 현재 추진 중인 긴급작전요구는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의 긴급작전요구의 일환(FY2021 MDA 예산설명자료)이며, 인도·태평양사령부의 긴급작전요구는 지역 차원에서 상층방어체계(사드, 이지스 BMD)와 하층방어체계(PAC-III MSE)의 통합 구현을 목표로 한다. 이는 주한미군 MD 체계가 남한 방어를 위한 독자적 체계가 아니라 인도·태평양 MD 체계의 하위체계로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 방어를 임무로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 또한 주한미군 사드 레이더가 전진배치모드로 운용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 미 미사일방어청과 육군의 지상시험(GT-18 Sprint 1, 2018. 4./GTI-19 Sprint 2, 2019. 6./8.)은 C2BMC Spiral의 6.4 에서 8.2-1/3으로의 성능개량 검증과 그 기반 하

에서 진행된 주한미군 긴급작전요구 2/3단계 아키텍처를 검증하기 위한 시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험에 사드 레이더가 전진배치모드(CX-2.1.1/CX-3.0)로 참여했다는 사실은 주한미군 사드가 전, 평시 전진배치모드로 운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 C2BMC와 주한미군 사드 레이더의 성능개량은 북한의 핵무력 완성 선언(2017. 11. 29.)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북한의 핵무력 완성은 수소폭탄을 장착한 북한의 ICBM이 언제라도 미국을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에 미국은 북한의 ICBM(중국의 ICBM도 포함해)의 공격에 대비해 서둘러 주한미군 사드 (레이더)의 성능개량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 질문 1 】 주한미군 사드 레이더를 한순간이라도 전진배치모드로 운용하는 것은 북한 탄도미사일로부터 남한을 방어하기 위해 사드를 들여왔다고 주장한 한미 군 당국의 한국민에 대한 기망입니다. 종말모드와 전진배치모드 간 운용 비율을 비롯한 주한미군 사드 레이더의 운용 실태에 관한 사실관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2 】 만약 주한미군 사드 레이더가 전적으로 종말모드로 운용되고 성능개량도 이를 위한 것이라면 국방부는 국민들에게 사드 성능개량 사실을 적극 알려 북한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을 보다 잘 지킬 수 있게 되었다고 홍보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오히려 주한미군 사드의 성능개량을 극구 부정하고 감춤으로써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주고 의구심을 사고 있습니다. 이는 주한미군 사드 성능개량이 주로 레이더의 전진배치모드의 운용을 지원하는 데 있고, 이에 따른 중국 등과의 관계 악화와 보복을 우려해 사드 성능개량을 부정하고 있음을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사드의 성능개량을 사실대로 밝혀 국민적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국민적 불안과 우려를 해소해 주기 바랍니다.

2. 소성리 주한미군 사드의 전진배치모드로의 운용과 이의 탐지, 추적, 식별 능력 향상은 미중 간 전략안정을 파괴하고 미국 절대 우위의 전략지형을 구축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 주한미군 사드 레이더의 전진배치모드로의 운용은 중국의 ICBM을 무력화함으로써 미중 간 전략안정을 훼손한다. 그 가능성은 미국의 과학자연맹이 이미 오래전(2011. 9.)에 논

중한 바 있다. 중국이 보유한 ICBM은 약 50여 기로, 미국이 GBI와 SM-3 Block 2A 이 지스 요격미사일을 500여 기만 갖추면, 10%의 요격률을 가정할 경우, 중국의 ICBM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 현재 미중 간 핵전력은 6,185기 : 290기로 미국이 일방적 우위에 있어 전력균형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중국은 미국에 대한 최소억제 수준의 핵전력을 보유하고 있어 미국의 핵선제공격으로부터 중국의 핵전력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호력을 갖춘 1980년대 이래로 미국과 전략안정을 이루고 있다.
- 그러나 소성리 주한미군 사드가 전진배치모드로 운용되고 지금과 같이 C2BMC와 사드 레이더를 중심으로 하는 성능개량을 거듭하면 할수록 중국의 대미 전략안정이 훼손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 미중 정상회담(2016. 4. 1.)에서 시진핑 주석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사드 한국배치가 “지역의 전략안정을 훼손한다”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힌 것도 사드가 가져올 미중 전략안정의 훼손을 크게 우려했기 때문일 것이다.
- 소성리 주한미군 사드 레이더의 전진배치모드로의 운용과 탐지, 추적, 식별능력의 개량으로 미중 간 전략안정이 위협받게 되면 중국의 한국에 대한 보복은 지금까지의 경제적 보복을 넘어서 군사적 보복으로까지 확장됨으로써 한국 안보는 북한 위협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큰 위협을 받게 되며, 미국의 전초기지로서 남한은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다방면에 걸쳐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 만약 중국이 핵전력을 증강해 전략안정의 훼손을 막고자 한다면 이는 세계적 차원의 핵군축 추세에 역행하는 것일 뿐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 이에 한국 안보를 위해서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도 주한미군 사드의 성능개량과 전진배치모드 운용은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 되며, 이에 대한 우리의 주권적, 안보적 차원의 감시체계가 갖추어지고 작동되어야 할 것이다.
- 한편 미국은 대중 절대우위의 전략지형 구축을 위해 아태지역에 중거리 탄도미사일 배치를 피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도 집요한 압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만약 남한에 미국의 전략무기로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이어 또 하나의 전략무기이자 공세성이 훨씬 강한 중거리 탄도미사일까지 배치된다면 중국의 반발은 훨씬 강도가 세질 것이며, 중국과 가장 가까운 미국의 둘도 없는 전진기지로서의 남한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위협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설 것이다.

【 질문 3 】 주한미군 사드 레이더의 전진배치모드로의 운용에 따른 미중 간 전략안정 훼손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파괴하고 한중 간 군사적 대결과 위협을 자초하게 됩니

다. 이를 막는 방안은 주한미군 사드를 철수시키거나 최소한 레이더가 전진배치모드로 운용되는 것을 막는 길뿐입니다. 주한미군 사드 레이더의 전진배치모드로의 운용을 막기 위한 문제인 정부의 입장과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4 】 주한미군 중거리 미사일 배치는 사드를 훨씬 능가하는 한국의 안보 위협과 국민 생명에 대한 위협을 가중시키게 됩니다.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의 남한 배치를 허용할 것인지 문제인 정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주한미군 사드 레이더를 통한 미국 절대우위의 미중 간 전략지형 구축은 주한·주일미군 사드 레이더를 축으로 한 한미일 3각 MD와 이를 매개로 한 한미일 군사동맹, 나아가 아태지역 집단방위(집단군사동맹, 콰드 플러스)의 구축으로 동아시아판 신냉전체제를 형성함으로써 비로소 완결된다. 이 과정에서 한국 MD는 미국 MD에 완전히 통합/편입된다.

- 주한미군 사드 배치는 동북아 신냉전체제 도래의 신호탄이다.
- 미국은 소성리 주한미군 사드 배치로 한미일 3각 MD 구축을 꾀한다. 현재도 주한·주일미군 MD 체계는 우주 배치 센서의 지원을 받은 주한미군 사드 레이더의 탐지, 추적정보와 역시 우주 배치 센서의 지원을 받는 일본 샤리키와 교가미사키 배치 AN/TPY-2 레이더의 탐지, 추적정보가 C2BMC를 경유하거나 P2P로 통합되고, 이들 정보가 C2BMC를 경유해 주한·주일미군 MD 체계 구성요소에 전송되는 등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 주한미군 MD 체계는 한국군 MD 체계와 주일미군 MD 체계는 자위대 MD 체계와 연동되어 있다. 따라서 한미일 MD 체계는 주한·주일미군 MD 체계를 매개로 해 이미 하나로 연동되어 있는 것과 같다.
- 따라서 한미일 3각 MD 체계 구축은 한일 MD 체계를 직접 연동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하며, 한일 MD 체계를 연동시키기 위한 한미일 3국군의 시도는 수년 전부터 이루어져 왔다. 2016년부터 매년 수차례에 걸쳐 실시되어 오고 있는 태평양 드래곤 한미일 연합 MD 훈련은 한일 MD 체계 간 직접 연동을 앞당기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태평양 드래곤은 남해와 태평양 등에서 장소를 달리하여 실시되었으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한일 GSOMIA) 체결로 이어졌다. 한일 간 MD 정보를 직접 공유하게 된 것이다.
- 한일 MD 정보 교환은 한일 MD 연합 작전의 수행을 전제로 한다. 태평양 드래곤 한미일 연합 MD 훈련 자체가 미군을 매개로 하는 한일 MD 연합 훈련이다. 나아가 한일

GSOMIA 체결 직후 한국 국방부가 한일 이지스함 간 직접 연동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국방부 정례브리핑, 2017. 3. 14.)도 한일 MD 체계 간 직접 연동과 한일 간 연합 MD 작전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제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를 둘러싸고 한일 정부 간 정치·외교적 갈등으로 한일 GSOMIA의 종료까지 고려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한미일 군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집요하게 한일 MD 체계의 직접 연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 국가별 또는 지역적 차원에서 사드와 이지스 체계 간, 이지스와 이지스 체계 간, 사드와 패트리엇 간 P2P 방식의 직접 연동이 구현되면 한미일 3각 MD는 한 단계 더 완성도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게 되며, 이 역시 시간문제로 보인다.
- 한미일 3각 MD 구축이 한미일 연합 MD 작전으로 이어지는 것은 필지의 사실이다. 유사시 한미 연합 MD 작전은 오산 기지 내 항공우주작전본부(KAOC)로, 미일 연합 MD 작전은 요코다 기지 내 공동통합작전조정센터(BJOCC)로 미 육군 제94 방공 및 유도탄 방어사령부(AAMDC) 전방지휘소가 전개되어 한미, 한일 MD 작전을 전술 지휘·통제함으로써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한일 MD 체계를 통합 작전 지휘·통제한다. 한미일 3각 MD 연합 작전도 한일 간 직접적인 MD 작전 수행이 핵심이다.
- 한일 이지스 체계 간 직접 연동을 꾀하는 한일 군은 MD 정보의 직접 공유를 넘어 태평양 드래곤 한미일 연합 MD 훈련에서 미일 이지스함이 연합 MD 요격작전까지 수행하듯이 한국군 이지스함이 요격미사일을 장착하면 한일 연합 MD 요격 작전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한일 이지스함 간 연합 MD 요격작전은 정치적 장애물만 없다면 군사적으로는 아무런 난관이 없다. 한일 MD 체계의 직접 연동을 통한 한일 간 연합 MD 작전은 이지스 체계를 이용한 자국 방어의 명분으로 전면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 한미일 3각 MD의 구축을 앞당기고 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또한 한미일 3각 MD가 완성된 후 한미일 3각 MD가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 방어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미 C2BMC의 지속적인 성능개량과 진화는 관건적 요소다.
- 주한미군 사드 레이더 정보는 물론 한국군 그린파인 레이더와 이지스 레이더 정보, 한국이 SM-3 Block- I A·B/II A 요격미사일을 도입하면 이지스 요격체계까지, 일본 배치 AN/TPY-2 레이더 정보는 물론 자위대의 이지스 레이더 정보 및 요격체계가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 방어에 복무하도록 하는 데서, 아울러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 방어에 동원될 한일 이지스 체계 간 정보 공유와 연합 요격작전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데서 미 C2BMC의 성능개량은 미 MD 체계의 성패를 가르는 사활적인 과제로 되기 때문이다.
- 아베 정권이 집단자위권 행사를 결정한 후 노골적으로 미국을 겨냥한 북·중 ICBM 요격을 일본 자위대의 미일 집단자위권 행사의 한 유형으로 예시하였듯이 한국군 이지스 요

격체계가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를 겨냥한 북·중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IRBM/ICBM) 요격에 동원되는 것이 현실로 될 수도 있다.

- 특히 주한미군 사드 레이더가 일본 배치 AN/TPY-2 레이더보다 북·중 ICBM에 대한 해상도 높은 탐지, 추적정보를 조기에 제공하고, 한국군 그린파인 레이더나 서해 해상 배치 한국군 이지스 레이더가 동, 남해에 배치된 미일 이지스 레이더보다 일본 본토와 오키나와를 겨냥한 북한의 단·중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해상도 높은 탐지, 추적정보를 조기에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C2BMC에 한국의 그린파인 레이더나 이지스 정보·요격체계까지 통합시켜 직간접으로 지휘·통제하려는 시도는 한미일 3각 MD 체계의 구축에 대한 미일 양국의 바람의 출발점을 이룬다.
- 그렇지만 미 CRS 보고서(2015. 4.)가 한미일 통합 BMD 체계는 “한국에는 별 혜택이 없을 것”이라고 정확히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주일미군 MD 체계나 자위대의 MD 체계, 나아가 양자 통합 MD 체계가 남한이 북한 탄도미사일을 방어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미일 통합 MD 체계가 제공하는 정보는 중심이 짧은 한반도 특성상 탄도미사일의 비행시간이 짧아 아무런 효용성이 없다.
- 한국군 MD 체계와 주한미군 MD 체계의 연동은 한미일 3각 MD 체계 구축의 전제로 되며, 이 과정에서 한국 MD 체계는 미국 MD 체계에 깊숙이 편입된다.
- 한국 MD 체계의 미 MD 체계 편입은 이미 정보·요격 등 모든 분야에서 높은 수준으로 구현되고 있다.
- 2012년 10월 28일, 한국 국방부는 한국 MD 체계의 미국 MD 체계 편입 기준으로 미국의 사드 X-밴드 레이더 배치 등 3가지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같은 시기 미 국방부 캐슬린 히스 정책담당 수석 차관보도 한국 MD 체계의 미국 MD 체계 편입 기준으로 사드 레이더 배치를 제시했다. 주한미군 사드 배치로 사드 레이더의 북중 탄도미사일에 대한 탐지, 추적 정보가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 방어에 기여함으로써 한국 MD의 미국 MD 편입 기준이 충족된 것이다.
- 한미 양국이 MD 연동 합의각서를 체결(2016. 1.)해 한국군 탄도탄 작전통제소(KTMO-Cell)와 주한미군 탄도탄 작전통제소(TMO-Cell)를 연동시키기로 합의하고 한국군 연동통제소(KICC)와 주한미군 연동통제소(JICC) 간 연동을 완료(연합뉴스, 2017. 5. 17.)한 것 또한 한국 MD의 미국 MD 편입의 징표라고 할 수 있다.
- 이를 위해 한국군은 항공우주작전센터(KAOC)의 장비를 성능개량하고, 전술데이터링크를 Link-16으로 업그레이드해 이를 2025년까지 한국군 연동통제소(KICC)와 PAC-III, 이지스함 등에 구축할 예정이다.
- 한국군 MD 체계와 주한미군 MD 체계 연동으로 한국군 그린파인 레이더와 이지스 레

이더가 획득한 북·중 탄도미사일에 대한 탐지, 추적정보가 미국 MD 체계에 전송되어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 방어에 기여한다면 이는 한국 MD의 미국 MD 편입 기준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다.

- 유사시 한미 간 ‘연합 방공 및 유도탄 방어 작전 협조본부(CAMDOCC) 운영 절차에 관한 합의서’(2012. 4. 12. 체결, 2013. 11. 8. 개정)에 따라 오산 공군기지 항공우주작전센터(KAOC) 내 한미연합 방공 및 유도탄 방어 작전 협조본부로 미 육군 제94 방공 및 유도탄 방어사령부(AAMDC) 전방지휘소가 전개되어 한미 통합 MD를 전술 지휘함으로써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작전통제를 담보한다. 이는 작전적 차원에서도 한국 MD가 미국 MD에 깊숙이 편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 실제로 정경두 전 국방장관은 최근 한미 군 당국이 양국 MD 체계 통합 및 연동 훈련을 실시했다는 사실을 밝혔다(동아일보, 2020. 6. 10.). 이 훈련에서 한미 양국군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가정해 탐지, 추적정보를 교환하고 한국군 MD, 주한미군 MD, 해외 미군 MD 요격자산을 통합해 대응했다고 한다. 이는 한국 MD가 요격과 작전 분야까지 이미 미국 MD에 편입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 국방부가 한미 양국 MD 체계 통합 및 연동 훈련 실시를 공개한 것 자체가 최초의 일이다. 박근혜 정권하에서 김관진 전 국방장관은 “타격(요격)은 따로 한다(2014. 6. 4.)”며 요격부문에서 한국 MD의 미 MD 편입 사실은 부정했다. 물론 한국 MD 레이더가 탐지, 추적한 정보를 미국에 제공하고, 그 정보가 한국 방어가 아닌 태평양 미군 방어와 미 본토 방어에 기여한다면 그 자체로 한국 MD의 미국 MD 편입으로 된다. 그런데 이제 국방부가 한미 MD 요격자산을 통합 운용한다고 밝힘으로써 한국 MD의 미 MD 편입이 확장되고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인정한 것이다.
- 한미 양국군 MD 체계의 연동과 통합 수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군 패트리엇 체계가 주한미군 패트리엇 체계와 상호 연동되는 가운데 연합 탄도탄방어작전계획에 따라 유도탄 적재장비 교환 운용 훈련, 연합 요격 훈련 등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한미 패트리엇 체계의 대대급 “교전통제소(ICC, Information Coordination Center) 간 상호 연동 훈련”을 통해서 “포착한 항적 정보를 상호 공유함으로써 동일 표적에 대한 동시 교전을 방지”(국방일보, 2015. 7. 15.)하는 등 사실상 “한 몸처럼”(국방일보, 2017. 4. 24.) 통합 운용되고 있다. 나아가 유사시 한반도에 전개되는 미국과 일본 주둔 패트리엇 장비와 병력을 “우리군 패트리엇 부대와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훈련도 진행되고 있다(아시아경제, 2017. 4. 24.).
- 주한미군 패트리엇 부대가 PDB-8 운영체제와 패트리엇 MSE탄을 도입해 주한미군 긴급작전요구 2단계(패트리엇 LoR), 3단계(사드 체계 내 패트리엇 통합)를 구현 중에 있듯이 한국군 패트리엇 부대도 이미 PDB-8 운영체제를 도입하고 패트리엇 MSE탄을 도입

중에 있어 한국군 패트리엇 부대의 주한미군 사드 체계와의 연동도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 사드 레이더 정보를 이용한 패트리엇 LoR(주한미군 긴급작전요구 2단계)의 시험 비행 성공(2020년 10월 1일)으로 주한미군 긴급작전요구 2/3단계의 구현은 한층 탄력을 받을 것 같다. 2단계 시험 발사(2020년 2월 20일)에서 드러난 패트리엇 MSE 요격체계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오류가 시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이렇듯 한반도 작전 전구에서 한미 양국군 간 MD 체계는 가장 상위 체계인 한미연합 방공 및 유도탄 방어 작전 협조본부(오산 항공우주작전센터)로부터 가장 하위 체계인 패트리엇 교전 통제소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으로 통합되어 있는 것이다.
- 한미 연합 MD 체계 통합 및 연동 훈련은 늦어도 2016년부터는 실시되어 왔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미는 제46차 한미연례안보회의(2014)에서 ‘포괄적 미사일 대응 작전개념 및 원칙(4D 작전개념)’을 수립하기로 합의하고 2015년에는 ‘4D 작전개념 이행지침’을 승인하였으며, 2016년 2월에는 ‘4D 작전개념 이행지침’에 대한 서명을 마쳤다. 바로 이 이행지침을 반영한 작전계획 5015의 대북 핵·미사일 방어 계획과 지휘통제 절차에 따라 한미 연합 MD 체계 통합 및 연동 훈련이 실시되어 왔을 것으로 판단된다. ‘포괄적’이라는 용어는 한국군과 주한미군 MD 자산은 물론 미 본토 등 해외미군 MD 자산까지 동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 본토와 해외미군 MD 자산까지 동원된다는 것은 한미 연합 MD 작전에 미국의 작전통제권(사격통제권)이 확보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사실 국방부는 최근까지도 “한미 간 상호운용성을 기반으로 북 미사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을 뿐 미 MD 체계와는 무관하다”(국방부, 사드철회평화회의 질의서에 대한 서면답변서, 2020. 3. 31.)고 주장한 바 있다. 비공개적으로 한미 MD 요격자산을 통합 운용하는 연합 MD 요격작전까지 실시해 오면서도 마치 정보만 공유하는 것으로 거짓 답변을 한 것이다.
- 한국 MD와 주한미군 MD, 해외미군 요격자산까지 통합 운용되고 이를 인도·태평양 사령부와 주한미군 사령부가 작전·전술 지휘통제한다는 것은 한국 MD 체계가 미국 MD 체계의 하부체계로 깊숙이 편입되는, 한국 MD의 미국 MD 편입이 최고단계에서 구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한국군 이지스함이 SM-3 요격미사일로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를 겨냥한 북·중 중·장거리 미사일을 요격해 준다면, 이는 한국 MD 체계의 미국 MD 체계의 편입을 궁극적으로 실현하는 가장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한국 국방부는 「2021~2025 국방중기계획」 보도자료(2020. 8. 9.) 그림(5쪽)에서 한국군 MD 체계를 설명하면서 한국군 이지스함의 SM-3 요격미사일 운용을 기정사실화로 쓰고 있다. 머지않아 이지스라는 미국 무기체계로 SM-3라는 미국산 요격미사일을 미군 사격통제하에서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 발사하는 최고 형태의 한미 MD 체계 통합의 구현을, 곧 최고 형태의 한국 MD 체계의 미국 MD 체계 편입의 구현을 현실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한미가 ‘한미동맹 위기관리 각서’를 개정해 위기관리 대상에 미국을 포함시킨다면 한국군 이지스함이 SM-3 요격미사일로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를 겨냥한 북·중의 중·장거리 요격미사일을 요격하는 임무는 더욱 확고히 한국군 MD 부대의 최고의 주된 임무가 될 것이다.
- 이렇듯 한국 MD의 미국 MD 편입은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미국이 제공한 MD 무기체계, 한국 MD 정보 및 요격자산의 미국 MD 체계 전면 편입, 한국군 MD 부대에 대한 미국의 작전통제권 행사에 이르기까지, 한 국가의 MD 체계가 이렇게까지 전면적으로, 깊숙이 미국 MD에 편입되어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적어도 일본은 겉으로라도 자국 MD 자산에 대한 작전통제권(사격통제권)을 독자 행사한다. 나토 국가도 자국 MD 자산에 대한 작전통제권(사격통제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며, 프랑스 등 일부 나토 국가들은 자국산 MD 무기체계를 사용한다.
- 이에 한국 MD 체계와 주한미군 MD 체계의 통합과 한국 MD 체계의 미국 MD 체계 편입은 사실상 공식적인 선언만 남겨 놓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김대중 정부가 한국 MD 체계 구축 불가와 한국의 미국 MD 체계 편입 반대 입장을 공식 천명한 이래로, 한국 역대 정권들이 비록 한국 MD 체계 구축에 나섰지만, 미국 MD 편입의 선만은 넘지 않았으나 이명박, 박근혜 정권하에서 한미 양국군이 야금야금 추진해 온 한국 MD 체계의 미국 MD 체계의 편입을 이제 문재인 정부가 공식적으로 용인, 천명해야 할 상황에 놓인 것이다.
- 한미일 3각 MD 구축은 한미일 군사동맹의 구축으로 이어진다. 한미일 군사동맹을 축으로 하는, 나토와 유사한, 아태지역 집단방위체제(군사동맹) 구축은 2차 세계대전 이래로 미국의 오랜 소망이었다. 그러나 잘 아는 바와 같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겪은 나라들이, 특히 한국이 식민지 종주국 일본과 군사동맹을 구축하는 것은 한국민의 정서상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금기 중 금기에 해당한다. 바로 오바마 정권은 이와 같은 한일 간 역사적 장벽을 넘어서기 위해 MD 전문가이자 심복인 리퍼트를 한국 대사에 임명했으며, 그는 촛불시위의 와중에서도 한일 GSOMIA 체결을 성사시킴으로써 아태지역 집단방위체제 구축 전 단계로 한미일 3각 MD와 군사동맹 구축에 거보를 내디뎠다.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일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이용해 한미일 MD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매개로 한미일 군사동맹을 구축하려는 것이었다.
- 이에 미 의회 CRS 보고서(2015. 4.)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는 “남한이 미국 편에 설 것

인지 중국 편에 설 것인지를 가름하는 리트머스 시험지” 또는 “보다 제도화된 (동북아) 지역 집단방위(군사동맹)의 견인차“라고 밝히고 있다. 미일은 한미일 3각 MD 구축으로 한국 MD를 미일 방어에 이용하려는 것과 함께 이를 촉매제로 삼아 한미일 군사동맹을 구축하려는 정치·군사적 목표를 갖고 있는 것이다.

- 이미 체결된 한일 GSOMIA에 더해 한일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ACSA)까지 체결되면 한일군사협력은 정보, 작전, 군수 등 전 분야로 확장되어 사실상 군사동맹 단계로 발전하게 된다.
- 미중 군사적, 경제적 대결이 격화되어 가는 가운데 트럼프 정권은 콰드 플러스라고 하는, 나토와 같은 아태지역 집단방위체제(군사동맹) 구축을 제안하고 나섰다. 미·일·인·호를 기본 축으로 해 이를 새로운 국제기구로 출범시키고 시간을 두고 여기에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를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 콰드 플러스는 나토가 과거에는 소련을, 현재는 러시아를 적으로 상정하고 있듯이 중국을 적으로 상정하고 있다. 따라서 콰드든, 콰드 플러스든 제도화되면 아태지역에서 콰드 (플러스) 대 중국이라는 대결 구도가 정착된다. 이 구도가 과거 냉전체제처럼 제로섬의 대결을 벌이게 될지 현재로서는 속단하기 어려우나 지금보다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대결이 더욱 격화되리라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 더욱이 전력의 측면에서 보나 지정학적 조건으로 보나 콰드 플러스의 주축은 한미일이 될 수밖에 없다. 미국은 이미 인도태평양전략(2019)에서 미일동맹을 아태지역의 코너스톤으로, 한미동맹을 동북아의 린치핀으로 묘사하고 있다.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통한 한미일 3각 MD 구축과 한미일 (의사) 군사동맹 구축을 한편으로 하고 여기에 호주와 인도, 뉴질랜드를 결합시켜 중국을 포위하는 미국 주도의 아태지역 군사동맹체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 한국이 여기에서 가담하지 않는다면 대중 포위체로서의 콰드 플러스는 반쪽짜리가 되고 만다. 반대로 한국의 가담이 중국에 주는 정치·군사적 타격은 매우 클 것이다.
- 미국이 콰드 (플러스)의 제도화 의향을 드러낸 시점을 전후해 양제츠와 왕위 등 중국의 고위 외교 담당 인사들의 연이은 방한도 콰드 플러스를 둘러싼 중국의 깊은 우려와 관심의 일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어쨌든 콰드 (플러스)를 집단방위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한국의 참여와 관계없이 동아시아에서 신냉전체제의 도래를 의미한다.
- 주한미군 사드 배치로 시작해 이를 통한 한미일 3각 MD 체계와 군사동맹 구축, 이의 콰드 플러스로의 확장은 동아시아에서 미중 간 전략안정을 크게 훼손시키고 미국 절대

우위의 전략지형이 들어서게 한다. 이 과정에서 중국이 취할 전략, 전술적 반발과 반격은 한반도 정세와 남한 정치, 군사, 경제에 실로 큰 충격을 줄 것이다.

- 이미 경험한 대로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따른 경제적 보복과 대중 3불 정책-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MD 편입 불가,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약속은 한국 정부의 향후 행보를 구속하는 것으로 한국에 큰 파장을 던졌으며, 한국이 더 이상 한미동맹에 매달릴 수만은 없다는 사실을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 남한이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에서 발을 뺀다면 콰드 플러스는 구색을 갖추기 힘들 것이며, 그 결과 콰드 플러스 대 중국과의 대결도 상당한 정도로 완화될 것이다.
- 한일 군사전력은 비슷한 수준이나 일본은 방어전력 위주고 한국은 공세전력 위주라는 점에서 콰드 플러스가 중국에 주는 군사적 부담은 당장은 한국 쪽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 이에 문재인 정부가 대중 3불 정책을 지키는 것은 양국 간 정치적 신의를 지키고 경제적 보복과 군사적 대결을 피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향후 아태지역의 신냉전적 대결 구도의 도래를 늦추거나 완화시키는 데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주한미군 사드를 철수시킨다면 아태지역을 대결 구도에서 협력과 평화 구도로 전환시켜 나가는 데서 결정적인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

【 질문 5 】 한일 이지스함 간 직접 연동 추진 상황과 연동 수준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6 】 한일 이지스함 간 연합 MD 작전 실시 계획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7 】 한미 연합 MD 통합 및 연동 훈련 시 주한미군 사드 레이더의 운용 모드가 종말모드였는지 전진배치모드였는지 사실관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8 】 한미 연합 MD 통합 및 연동 훈련 시 한국군 그린파인 레이더가 획득한 정보가 주한미군에 제공되며, 주한미군 사드 레이더의 탐지, 추적정보가 한국군에 제공되는지 사실관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9 】 한국 해군이 도입하고자 하는 SM-3 요격미사일 도입 기종과 수량, 시기 등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10 】 한미 패트리엇 대대급 교전통제소(ICC)가 연동되어 한 체계처럼 운용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유사시 표적 미사일에 대한 한미 패트리엇 체계 간 교전 분배와 우선순위 및 최종 교전 명령권은 한미 양국 중 어느 쪽이 행사합니까?

【 질문 11 】 한반도 유사시 한국군 MD 전력에 대한 최상위 사격통제권은 한미 양국 중 어느 쪽이, 누가 행사합니까?

【 질문 12 】 한미 간에 맺은 MD 작전통제권 행사와 관련한 합의 내용의 개요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작전계획 5015에 따른 한국군 MD 부대의 방어 자산 목록(DAL)에 주한미군 자산도 포함되는지 사실관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13 】 주한미군 사드 배치, 한국군 MD의 주한미군 MD와의 연동과 정보 제공, 한국군 요격자산의 역내외 미군 자산과의 통합 운영 및 작전훈련, 유사시 미 육군 제94 방공 및 유도탄 방어사령부(AAMDC)의 전술지휘와 이를 통해 뒷받침되는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의 한국군 MD에 대한 작전통제, 주한미군사령관의 한국군 MD 자산에 대한 작전통제권 행사 등 한국 MD의 미국 MD의 편입 기준은 모든 부문에서 충족시키고도 남습니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여전히 한국 MD의 미국 MD 편입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한국 MD가 미국 MD에 편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한국 MD의 미국 MD 편입 기준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14 】 한국 MD가 유사시 역내외 미군과 미 본토 방어에 동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한미연합 통합 및 연동 작전 연습을 중단하고 한국군 MD 체계를 독자체계로 운용하며 한국이 한국군 MD 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직접 행사해야 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한미 간 작전통제권 환수 논의에서 작전통제권 환수 후에도 한국군 MD 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미국이 계속 행사하게 되는지 사실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15 】 ‘한미동맹 위기관리 각서’를 개정해 위기관리 대상에 미국을 포함시킬 것인지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16 】 주한미군 사드 성능개량과 한미일 MD 체계 및 한미일 (의사) 군사동맹 구축으로 사드 관련 대중 3불 정책-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MD 편입 불가,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은 사장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의 중국의 경제적 보복을 가중시키고, 외교적 보복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한미 양국군이 추동하고 있는 사드 성능

개량과 한미일 MD 구축, 한국 MD의 미국 MD 편입, 한미일 (의사) 군사동맹 구축을 용인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중단시키고 대중 3불 정책을 지킬 것인지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17 】 주한미군 MD 훈련과 지난 5·29 소성리 사드 장비 반입 과정에서 소성리 주한미군 사드 장비 외에 최소한 2~3기의 사드 발사대가 남한에 추가 반입되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밖에도 어떠한 사드 장비들이 국내에 추가 반입되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18 】 이른바 한국이 콰드 플러스에 참여할 것인지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19 】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과 한미동맹에 기대서는 더 이상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을 이행해 나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부딪혀 있습니다. 한미동맹에서 벗어나 미중 간 균형외교를 통해 국가와 민족의 활로와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의 이행의 길을 개척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계속되는 성능개량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사드가 남한 방어에는 여전히 군사적 효용성이 없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 현재 주한미군은 주한미군 긴급작전요구(JEON)라고 하는 주한미군 MD 전력 증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단계는 사드 발사대를 레이더로부터 이격시켜 요격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사드 원격발사, 2단계는 사드 레이더 탐지, 추적정보를 이용한 패트리엇의 원거리 발사(LoR), 3단계는 패트리엇 MSE탄과 발사대를 사드 포대에 통합시키는 사업이다. 1단계는 이미 시험발사에 성공해 주한미군 사드가 구현 중에 있으며, 2단계와 3단계 1차 사업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구현할 예정이라고 한다.
- 주한미군 긴급작전요구가 구현되면 사드와 패트리엇의 방어범위가 확대되고 요격률도 높아진다는 미 미사일방어청과 육군의 주장은 어느 정도 사실로 보인다.
- 그러나 한반도는 중심이 짧고 대부분 산악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어 공격 탄도미사일을 탐지, 추적, 식별, 요격에 필요한 시간을 거의 허용하지 않는다. 주한미군 긴급작전요구 1/2/3단계도 바로 이러한 지형적, 시간적, 물리적 한계를 극복해 보려는 노력의 일환으

로 보인다. 그러나 주한미군 긴급작전요구 사업으로 사드와 패트리엇이 구현하게 될 성능이 한반도에서 MD가 근본적으로 갖는 시간적, 물리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수많은 이동발사대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은 회피기동과 동시다발 공격 등으로 남한의 미사일 방어망을 얼마든지 무력화할 수 있다.
- 또한 북한의 구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비행 중 자연적으로 형성하는 공중제비돌기나 나선형과 같은 궤도는 사드, 패트리엇의 레이더로 정확한 탐지, 추적이 어렵고 요격미사일이 공격 탄도미사일의 불규칙한 궤도를 추적할 수 있는 급가속의 기동성을 발휘할 수 없어 요격이 불가능하다.
- 또한 북한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3(북한판 이스칸데르)은 비행 중 저궤도로 변칙 비행을 하고 종말단계에서 풀업을 할 수 있으며,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KN-24 탄도미사일도 이동발사대를 이용한 은폐, 신속 발사가 가능하고 비행 중에 기동과 유도 정밀타격이 가능하며, KN-25 다연장로켓(북한판 에이태컴스)은 로켓과 미사일의 계선을 허물어 정밀 유도와 타격이 가능하며, 한국의 KTSSM과 유사하게 4발을 20초 간격으로 연속발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KN-25 로켓을 일제히 동시 발사하면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MD 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CRS 보고서, 2020. 7. 14.). 이 무기체계들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북극성)과 함께 주한미군 긴급작전요구 1/2/3단계에 따른 사드, 패트리엇의 성능개량과 통합에도 불구하고 요격이 어렵다.
- 최근 미국이 MSE 요격미사일을 이용해 변칙 기동을 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요격에 성공했다고 하나 어떤 상황에서 요격을 했는지 미지수며, 특히 동시발사에 대한 요격일수는 없다는 점에서 MD 체계의 요격 한계는 여전히 극복되지 않고 있다(문화일보, 2020. 7. 23.).
- 따라서 MD가 지리적, 시간적,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공격 탄도미사일 개발 속도를 따라잡는 것은 재정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영원히 불가능할 수 있다. 공격 미사일과 로켓의 MD 요격 회피 기능은 날고 있는데 반해 MD 요격 능력은 기어가는 수준이다. 주한미군 긴급작전요구 1/2/3단계 구현 후에도 계속될 사드, 패트리엇, 이지스 체계의 성능개량으로 MD 요격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공격 탄도미사일을 무력화하는 것은 적어도 한반도에서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단언할 수 있다.
- 이에 국방부도 “사드가 남한 방어에 부적합하다.”는 보고서를 이미 2013년에 낸 바 있다(진성준 의원실, 2015. 5. 21.).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엄청난 자원을 낭비하면서 MD 개발과 배치를 계속하고 있고, 남한에 사드 포대까지 배치한 것은 MD를 포함한 핵우산 제공을 명분 삼아 군사동

맹을 유지, 확장하려는 정치·군사적 속계산이 작용하고 있다고 하겠다.

- 또한 한반도 MD와 달리 상대적으로 미사일 요격에 필요한 시간적, 물리적 조건이 주어지는 북·중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 가능성을 높여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를 방어해 보려는 데 MD 투자의 최우선적 이유가 있다.
- 실제로 주한미군 긴급작전요구는 인도·태평양사령부의 긴급작전요구의 일환이며, 인도·태평양사령부 긴급작전요구는 지역적 차원에서 상층방어체계(사드, 이지스 BMD)와 하층방어체계(PAC-III MSE)의 통합 구현을 목표로 한다. 이는 주한미군 MD 체계가 남한 방어를 위한 독자적 체계가 아니라 인도·태평양 MD 체계의 하위체계로 인도·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 방어 임무를 지닌다는 것을 의미한다.
- 이것이 함의하는 바는 북미 간, 미중 간 유사시 주한미군 사드 레이더가 한국 방어보다는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 방어를 위해서 전진배치모드로 운용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다.
- 이는 사드 레이더의 종말모드로의 운용을 전제로 하는 주한미군 긴급작전요구 1/2/3단계 구현으로 주한미군 MD 체계가 구현한 성능마저 북미, 미중 유사시에는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 사드 레이더를 추가 배치해 1기는 전진배치모드로 운용하고 다른 1기는 종말모드로 운용하거나, 1기의 사드 레이더를 수시로 전진배치모드와 종말모드로 전환해 가며 운용하거나, 사드 레이더가 전진배치모드와 종말모드를 동시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면 주한미군 긴급작전요구를 통해 구현된 사드, 패트리엇 성능도 살리고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 방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그러나 한국에 사드 레이더를 추가 배치하는 것은 한국민의 정치적 반발과 중국의 반발을 고려하면 쉽게 실현될 수 없다. 또한 사드 레이더 1기를 두 모드로 전환해 가며 운용하는 것은 어느 한쪽 방어에 공백이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 없으며, 1기의 사드 레이더가 두 가지 모드로 동시에 운용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런 사실 자체가 사드 레이더의 남한 방어에 대한 기여는 미군의 태평양 미군과 본토 방어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제약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 이러한 상황은 어디까지나 한반도에서는 근원적으로 MD가 무용하다는 사실로부터 비롯된 것이지 주한미군 긴급작전요구 1/2/3단계를 통한 주한미군 MD의 성능개량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의 MD 무용론을 극복하기는 어렵고, 이에 주한미군 사드가 더 이상 남한에 배치되어 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잘 말해준다.

【 질문 20 】 주한미군 사드 (레이더)를 추가 도입할 계획이 있습니까?

【 질문 21 】 한국군이 사드 포대를 도입하거나 주한미군 사드 포대를 인수할 계획이 있는지 사실관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22 】 주한미군 사드 포대를 철수시켜 한반도의 비핵화를 촉진하고 동아시아에서 신냉전체제가 들어서는 것을 저지해 볼 정책적 의지가 있는지,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소성리 사드는 불법 도입에 이어 불법 사드 부지 공여, 불법 환경영향평가, 불법 방위비분담금 전용 등 불법으로 점철되어 오고 있다. 미 본토 방어를 위해 평시에는 우리나라의 토지, 세금, 환경과 주민의 삶을, 유사시에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자산 등을 희생시킬 것을 전제로 해 배치되어 있는 것이다.

- 주한미군 사드 배치는 부지 공여와 운영에 대한 한국의 영토 주권과 사법 주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한미 간 조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나 이 모든 것이 생략된 채 불법으로 점철되어 왔다. 주한미군 사드 배치의 법적 근거로 삼을 수 있는 한미 간 합의는 ‘한미 공동실무단 운용 결과 보고서’와 이에 근거한 ‘한미 공동 보도자료’(2016. 7. 8.)뿐이다. 그러나 이 문서는 국제법적 지위를 갖는 문서로 체결된 것이 아니며 심지어 ‘기관 간 약정’의 지위조차 갖지 못한다. 이에 소성리 사드 배치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원천무효이며, 이러한 위법 상황을 제거하기 위해서 주한미군 사드는 마땅히 철수되어야 한다.

- 주한미군 사드의 불법 배치를 도외시하더라도 소성리 사드 배치는 정부 스스로가 주장하고 있듯이 임시배치 상태에 불과하다. 이를 정식 배치하기 위해서는 부지 공여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이 시행되어야 한다. 사드 부지 공여 역시 영토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조약(소파 2조 1항)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한미 당국이 주한미군 사드 부지 공여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 ‘(한미 간 사드 배치 부지 공여를 위한) 합의 건의문(Agreed Recommendation, 2017. 4.)’뿐이다. 그러나 이 ‘합의 건의문’은 소파 합동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거쳤을 뿐, 조약으로서 국내법적 절차-정부 대표 서명,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치지 않아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으로서의 요건을 결여하고 있다.

- 따라서 '합의 건의문'에 근거한 1차 부지 공여(32.8m²)는 불법이며 현재 진행 중인 2차 부지 공여(1차 공여 면적 포함 총 70만m²)도 법적 근거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나아가 주한미군 사드 부지 제공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위반이다.
- 또한 부지 쪼개기 공여라는 국방부의 꼼수로 소성리 사드 부지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시행되지 않았고 일반환경영향평가도 중단되어 있다. 심지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조차 환경부의 각종 환경기준 국내법 적용 우선 적용(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7. 9. 4.) 등의 조건부 승인조치를 주한미군이 수용하지 않아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소성리 사드 부지는 군사시설로도 지정되지 않은 임의시설에 불과하다. 적법한 부지 공여 절차와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사드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사전공사의 금지를 규정한 환경영향평가법(제34조) 위반이다.
- 방위비분담금을 전용해 주한미군 사드 기지의 건설 공사를 하는 것은 불법으로, 정부가 스스로를 범법자로 전락시키는 꼴이다. 주한미군사령부는 2018년 사드 부지 설계비로 5만 달러(약 6,000만 원)를 전용(2018 방위비분담금 연례 집행보고서)했으며, 2021년에는 사드 부지의 탄약고 3개 동과 관련 시설, 상/하수도, 전기시설 공사에 방위비분담금 4,900만 달러(약 580억 원)를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 방위비분담금을 전용해 사드 부지 공사를 하는 것은 한미소파 위반이다. 한미소파 5조는 대한민국이 "시설과 구역을 제공하는 대신 미합중국은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방위비분담금을 사드 부지 공사비로 전용하는 것은 또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위반이다.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는 주한미군 사드 부지 설계비와 탄약고 및 부지 기반 공사에 방위비분담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없다. 제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2014~2018)이나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도 사드 부지 건설비(설계비 및 탄약고 등)를 방위비분담금에서 전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제11차 협정은 체결도 되지 않았으며 국회 동의도 받지 않았다. 설사 제11차 협정에서 사드 부지 건설 공사비 부담 항목을 신설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한미소파에 위배되어 불법이다.
- 이에 한민구 전 국방장관이나 강경화 외교장관도 사드 부지는 우리가 제공하고 운영비는 미국이 제공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2020. 2. 18.)이라고 확인한 바 있다.
- 따라서 방위비분담금을 불법 전용해 이뤄질 사드 부지 탄약고 공사는 결코 시행되어서는 안 되는 불법 행위로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 부지 공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환경영향평가는 평가 대상을 특정하지

못하는 맹목적인, 깎깎이 환경영향평가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어떠한 환경영향평가도 위법이며, 그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

- 또한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지 않는 조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부지 공사는 불법이다.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설계나 공사 등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이렇듯 주한미군 사드 배치는 국가 영토, 재정, 환경 주권을 희생시키고 주민의 삶을 저당 잡고 있다.

【 질문 23 】 주한미군 사드 도입→부지공여→환경영향평가→부지공사 등으로 이어지는 불법성을 제거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당위이자 정부의 책무입니다. 법적 근거 없이 도입된 주한미군 사드 배치의 불법성을 제거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입장과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24 】 법적 근거 없이 공여된 주한미군 사드 부지 공여의 불법성을 제거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입장과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25 】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진행되고 있는 주한미군 사드 부지 환경영향평가의 불법성을 제거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입장과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26 】 법적 근거 없이 진행되는 주한미군 사드 부지 공사의 불법성을 제거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입장과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27 】 국방부는 사드철회평화회의 질의서에 대한 답변(2020. 3. 31.)에서, 2018년 주한미군이 방위비분담금 5만 달러를 사드기지 부지개발사업 설계비로 5만 달러를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사드 기지 부지 개발에 방위비분담금을 사용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이에 국방부는 불법 전용된 5만 달러의 환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도 지금까지 불법 전용된 방위비분담금을 전액 환수하고 향후 방위비분담금의 불법 전용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28 】 탄약고와 전기/수도 등 기반공사비로 방위비분담금 4,900만 달러가 불법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6. 주한미군 사드는 남한 안보에 치명적 위협을 가하는 존재로 결코 남한에 배치되어서는 안 되는 무기체계다. 따라서 주한미군 사드는 즉각 철수해야 하며, 그 전까지는 주한미군 사드 레이더가 최소한 전진배치모드로 운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군사주권적, 사법주권적 감시·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주한미군 사드는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보다 오히려 더 위태롭게 한다.
- 또한 주한미군 사드는 도입 과정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또한 앞으로도 모든 과정이 불법으로 점철될 무기체계다.
- 따라서 주한미군 사드를 즉각 철수시켜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불법성을 제거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다.
- 주한미군 사드 철수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대결적 구도를 완화시켜 판문점/평양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 이행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번영과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 아울러 주한미군 사드가 철수되기 전까지는 주한미군 사드 운용 실태에 대한, 특히 사드 레이더의 전진배치모드로의 운용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군사주권적, 사법주권적 차원의 감시,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미국·루마니아와 미국·폴란드 간 MD 협정은 루마니아와 폴란드가 자국 내 미국의 이지스 어쇼 기지에 대한 군사주권적, 사법주권적 관할권을 보장함으로써 루마니아와 폴란드의 기지 사령관이 미국의 이지스 어쇼 MD 기지를 감시·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고 있다. 나아가 미국이 루마니아와 폴란드에 요격미사일을 포함한 이지스 어쇼 체계의 구성요소, 주둔 규모, 훈련 등에 대해 서면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문재인 정부는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주한미군 사드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주한미군 사드 레이더가 전진배치모드로 운용되는 것을 막아야 하며 이를 위해 루마니아나 폴란드가 자국 내 미국의 MD 체계에 대해 확보하고 있는 수준의 군사주권적, 사법주권적 감시, 통제장치라도 확보해야 한다.

【 질문 29 】 주한미군 사드의 운용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군사주권적, 사법주권적 차원의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입장과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30 】 주한미군 사드 레이더의 전진배치모드로의 운용과 성능개량을 막기 위해서는 한국군과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감시, 통제기구의 운용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